

# 시민의 총선 추진기획단

문의 : 시민의총선을 꿈꾸는 시민들 김영진(042-224-2495 / 010-9544-2678)

##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0년 4월 9일(목)

발 신 / 시민의 총선을 꿈꾸는 사람들(042-224-2495/010-9544-2678)

제 목 / 시민의 총선 의제 관련 정책 질의 결과(총 20장)

### <시민의 총선 의제 관련 정책 질의 결과> 시민의 진짜 이야기가 정치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총선 기획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21대 총선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들에게 정책들을 질의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시민의 총선 대화모임을 통해 정리한 10개 분야 의제에 대한 39개 정책들이다. 10개 의제는 정치, 환경, 주거와 부동산, 노동, 동물, 복지, 젠더, 청년, 청소년, 주민자치이고, 의제별로 전체 39개 정책들이다. 39개 정책들은 아래 표와 같다.

#### ■ 시민의 총선 10개 의제별 정책

분야		정책 제안
정치	1번	국회의원 특권 폐지
	2번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
	3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
	4번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환경	5번	기후위기와 경제 불평등을 그린뉴딜로 함께 해결
	6번	탄소를 줄이는 먹거리 실천 시스템 구축
	7번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
	8번	환경을 위한 윤리적 소비 기반 구축
주거·부동산	9번	공공임대 및 사회 주택 대폭 확대
	10번	증가하고 있는 빈집, 상가 공실 문제 해결
	11번	최소주거환경 보장
	12번	주거 투기 규제
노동	13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망 구축
	14번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 의무화
	15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16번	죽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 환경 구축
동물	17번	동물의 기본권 보장

분야		정책 제안
	18번	동물원 폐쇄 및 전환
	19번	반려동물 보호 제도 개선
	20번	비윤리적인 축사 환경 개선
복지	21번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22번	다문화, 차별이 아닌 환대하는 정책
	23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축
	24번	재난(질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젠더	25번	디지털 성착취 수사과 대응책 마련하고 처벌 강화
	26번	성평등 교육 강화
	27번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	28번	교육 불평등 해소의 시작은 대학에서 실행
	29번	청년 마음건강 정책 확대 추진
	30번	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 개편
	31번	청년금융안전망 구축
	32번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청소년	33번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보장
	34번	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
	35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편
	36번	청소년 행복추구권 보장 필요
주민 자치	37번	투명하고 개방적인 주민자치 실시
	38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마을로 가는 이중분권 강화
	39번	지속가능한 자치기반 구축

시민의 총선 기획팀은 질의서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하고, 유선 전화로 최소 2회 이상 협조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철민, 이장우, 송인경(이상 동구)’, ‘황운하, 이은권, 홍세영(이상 중구)’, ‘박병석, 이영규, 김순자(이상 서구갑)’, ‘박범계, 양홍규, 이동규, 김정열(이상 서구을)’, ‘조승래, 장동혁, 양순옥, 김병수(이상 유성구갑)’, ‘김소연, 이범용(이상 유성구을)’, ‘박영순, 정용기, 김근식, 김낙천(이상 대덕구)’ 후보는 질의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전체 28명의 출마자 중 23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이강철(충청의 미래당, 서구갑), 김선재(민중당, 유성구갑),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김윤기(정의당, 유성구을), 강휘찬(국가혁명배당금당, 대덕구) 후보만이 질의서를 회신하였다.

응답한 후보자 중 김선재, 김윤기, 이강철, 이상민 후보는 39개 정책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다. 강휘찬 후보는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나 ‘국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반려동물 보호제도 개선’,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보장’, ‘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 ‘마을로 가는 이중분권 강화’, ‘지속가능한 자치기반 구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윤기 후보의 경우 39개 정책들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세부 내용은 ‘첨부 시민의 총선 의

## 제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참조>

이번 시민의 총선은 지난 1월 18일부터 491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인 대화모임 진행 후 101개의 의제를 발굴하였고, 101개 의제를 다시 10개 분야 39개 정책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10개 분야별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의제투표에 10,44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즉, 전국의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만든 것이다.

시민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만들고, 이러한 정책들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실행해 달라는 의미로써 질의한 것이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시민의 총선 질의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는 시민의 이야기를 외면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의 진짜 이야기를 한다면, 21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시민의 총선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저조한 것을 보면, 21대 국회도 늘 그렇듯이 시민을 외면한 정치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이번 회신결과로 인해서 우려로 바뀌었다.

시민의 총선 39개 정책들은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공약박물관을 웹페이지로 만든 후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했는지', '답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가 '국회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는지, 아님 지속적으로 '정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외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총선 기획단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0년 4월 9일

## 시민의 총선 추진기획단

■ 첨부 1. 시민의 총선 의제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분야		정책 제안	강휘찬(대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강철(서구갑) (충청의미래당)	김선재(유성구갑) (민중당)	이상민(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윤기(유성구을) (정의당)
정치	1번	국회의원 특권 폐지 1.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제 연동(3배) 2. 국회 불출석시 월급 삭감 3. 국회의원 특권을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O	O	O	O	O
	2번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 1.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	O	O	O	O	O
	3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 1. 잘못된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	X	O	O	O	O
	4번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1.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 공약 의무 평가 후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2. 국회의원 공약 실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도 확대	X	O	O	O	O
환경	5번	기후위기와 경제 불평등을 그린뉴딜로 함께 해결 1.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정책 2.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단계적 목표 제시 3.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등의 종합적인 그린뉴딜 정책 실시	O	O	O	O	O

분야		정책 제안	강휘찬(대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강철(서구갑) (충청의미래당)	김선재(유성구갑) (민중당)	이상민(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윤기(유성구을) (정의당)
	6번	탄소를 줄이는 먹거리 실천 시스템 구축 1. 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의 주 1회 채식 의무화 2.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확대	O	O	O	O	O
	7번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 2.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공장의 미세먼지 배출 규제 3.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및 녹지 보존	O	O	O	O	O
	8번	환경을 위한 윤리적 소비 기반 구축 1. 배달, 숙박, 마트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2. 프리사이클링(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가게 지원	O	O	O	O	O
주거· 부동산	9번	공공임대 및 사회 주택 대폭 확대 1. 공공임대 주택 및 사회주택 대폭 확대 2. LH임대주택 임대비용 현실화 3. 대학기숙사 건립 확대를 통한 청년 주거비용 경감	O	O	O	O	O
	10번	증가하고 있는 빈집, 상가 공실 문제 해결 1. 장기 방치되어 있는 빈집과 상가의 ‘빈집세’, ‘공실세’ 도입 2. 지자체의 빈집, 상가 공실 대응 책임 강화 및 법적 권한 부여	O	O	O	O	O
	11번	최소주거환경 보장 1.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의 최소면적 보장 2.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을 위한 전면적인 주거 정책실시	O	O	O	O	O

분야		정책 제안	강휘찬(대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강철(서구갑) (충청의미래당)	김선재(유성구갑) (민중당)	이상민(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윤기(유성구을) (정의당)
	12번	주거 투기 규제 1. 1인 보유주택 수 제한 2. 고위공직자의 집 보유 제한 3. 기존 정책 기준 강화 (보유세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O	O	O	O	O
노동	13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망 구축 1. 특수 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법 제정 2.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단기간 보험 정책 강화 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O	O	O	O	O
	14번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 의무화 1.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의무화	O	O	O	O	O
	15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1.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강화 2.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실시 3.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을 위한 불안정 고용수당 지급	O	O	O	O	O
	16번	죽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 환경 구축 1.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책 및 보호망 구축 2. 중대재해에 대한 최고책임자 처벌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O	O	O	O	O
동물	17번	동물의 기본권 보장 1.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 및 실행 선고 2.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동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법률	O	O	O	O	O

분야		정책 제안	강휘찬(대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강철(서구갑) (충청의미래당)	김선재(유성구갑) (민중당)	이상민(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윤기(유성구을) (정의당)
		제정 필요					
	18번	<b>동물원 폐쇄 및 전환</b> 1. 자연생태 차원의 동물 방생 2. 생태동물원 전환을 위한 법률 제정	O	O	O	O	O
	19번	<b>반려동물 보호 제도 개선</b> 1. 반려동물 분양에 대한 절차 엄격화 2. 동물 보호소의 공적 영역 전환	X	O	O	O	O
	20번	<b>비윤리적인 축사 환경 개선</b> 1. 공장식 축사, 사육밀도 제한 등 동물복지형 축사 확대	O	O	O	O	O
복지	21번	<b>기본소득 단계적 도입</b> 1. 청년, 농민, 재난 등 분야별 기본소득을 통한 정책실험 후 전 국민 확대 추진 2.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립을 통한 기본소득 실시 로드맵 수립	X	O	O	O	O
	22번	<b>다문화, 차별이 아닌 확대하는 정책</b>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및 기본권 보장 2.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경영 평가 개선 3. 우리 사회 안에서 동등한 참여권리, 기회평등, 법적평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	O	O	O	O	O
	23번	<b>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축</b> 1. 장애인 탈 시설을 위한 환경 구축	O	O	O	O	O

분야		정책 제안	강휘찬(대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강철(서구갑) (충청의미래당)	김선재(유성구갑) (민중당)	이상민(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윤기(유성구을) (정의당)
		2. 학령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3.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 시설, 저상버스 등)					
	24번	<b>재난(질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b> 1. 마스크 대란 등 재난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구축 2. 사회적 약자일수록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문제 해결 3.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재발 방지를 위한 생태전환 투자 확대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확대	○	○	○	○	○
젠더	25번	<b>디지털 성착취 수사와 대응책 마련하고 처벌 강화</b> 1.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대대적인 수사 및 대응책 마련 2.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및 방관자 모두 처벌 강화	○	○	○	○	○
	26번	<b>성평등 교육 강화</b> 1. 초중고 과정에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 의무화 2. 세대별 성평등 교육 시행	○	○	○	○	○
	27번	<b>차별금지법 제정</b> 1. 차별금지법 제정	○	○	○	○	○
청년	28번	<b>교육 불평등 해소의 시작은 대학에서 실행</b> 1. 국공립대 확대 및 대학평준화 정책 추진 2. 부실대학 규모 축소 및 폐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	○	○	○
	29번	<b>청년 마음건강 정책 확대 추진</b> 1. 마음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공시스템 확대 2. 직장인 건강검진 시 마음건강 상담 의무화	○	○	○	○	○



분야		정책 제안	강휘찬(대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강철(서구갑) (충청의미래당)	김선재(유성구갑) (민중당)	이상민(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윤기(유성구을) (정의당)
	30번	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 개편 1. 지역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안정성 대폭 강화 정책(내일채움공제 등) 2. 청년 당사자의 직접 지원 확대 및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O	O	O	O	O
	31번	청년금융안전망 구축 1.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금융안전망 구축 2. 약탈적 금융제도의 규제 3. 청년층 대상 급전불법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O	O	O	O	O
	32번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1. 주민자치회 청년 참여 의무화 2. 예산 결정권을 갖는 청년참여기구 확대 3. 청소년과 교복 입은 시민을 위한 참여예산제	O	O	O	O	O
청소년	33번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보장 1. 만 16세 교육감 투표권 보장	X	O	O	O	O
	34번	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 1. 학습선택권 보장 제도화(자율학습, 시간표 등) 2. 다양한 공교육 실시(성평등, 노동, 민주시민 등) 3. 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X	O	O	O	O
	35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편 1. 학교와 회사의 깁깁이식 관리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중앙관리 및 감시 강화 2. 취업률에 반영되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중도포기 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마련	O	O	O	O	O

분야		정책 제안	강휘찬(대덕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강철(서구갑) (충청미래당)	김선재(유성구갑) (민중당)	이상민(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윤기(유성구을) (정의당)
	36번	청소년 행복추구권 보장 필요 1.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 창조 기회 부여 2. 하루 교육 총량제 도입(하루 8시간 이상 교육 금지)	O	O	O	O	O
주민 자치	37번	투명하고 개방적인 주민자치 실시 1.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의 지원금 사용 내역 의무 공개 2. 각종 주민자치 관련 대표 및 위원들의 참여방식 간소화	O	O	O	O	O
	38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다시 마을로 가는 이중분권 강화 1. 자치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가 주민들을 실질적인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이중분권 정책 전면 확대 2. 주민들이 주민세를 직접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권한 강화	X	O	O	O	O
	39번	지속가능한 자치기반 구축 1. 마을공간의 시민자산화 지원 2. 지역자본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X	O	O	O	O

■ 첨부 2. 시민의 총선 의제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 김윤기 후보 추가 의견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정치	1번	국회의원 특권 폐지 4.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제 연동(3배)	-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의원 보수와 수당 항목, 적정액을 산정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세비 30% 삭감 효과)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5. 국회 불출석시 월급 삭감 6. 국회의원 특권을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
	2번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 2.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	- 검찰총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 지방검사장 관할 구역은 현재의 지방검찰청과 소관 지원 기준
	3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 2. 잘못된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4번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3.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 공약 의무 평가 후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4. 국회의원 공약 실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도 확대	- 현행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를 폐지하고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윤리심판원이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 -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해 심사·평가하도록 함
환경	5번	기후위기와 경제 불평등을 그린뉴딜로 함께 해결 3.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정책 4.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단계적 목표 제시 3.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등의 종합적인 그린뉴딜 정책 실시	-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실어 천명하는 것이 될 것 -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토건경제, 화석경제와 단절하는 결단을 내리고, 탄소배출을 빠르게 감축하 면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해야함
	6번	탄소를 줄이는 먹거리 실천 시스템 구축 3. 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의 주 1회 채식 의무화 4.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중심 국가식량공급체계 마련 · 지역 및 권역별 식량자급 계획에 따른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수립 · 저소득층에 식료품비 구입 지원.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및 아침 간편식 지원 · 마을공동급식 등에 지역산 제철농산물을 공급 ·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체계 구축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공공급식지원 센터 설립</li> <li>· 지역중심 식량공급체계를 담당할 거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물지원 확대</li> </ul>
	7번	<b>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b> 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 5.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공장의 미세먼지 배출 규제 6.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및 녹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li> <li>-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li> <li>-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판매금지</li> </ul>
	8번	<b>환경을 위한 윤리적 소비 기반 구축</b> 3. 배달, 숙박, 마트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4. 프리사이클링(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가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생산성 향상 및 재고최소화 등 생산과정에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할수 있는 기술개발 및 체계개발</li> <li>- 일회용 포장재를 대체한 재사용 포장재 사용 확대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li> <li>-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생산자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li> <li>- 재제조산업과 재활용산업을 고도화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li> <li>- 플라스틱, 비닐 등은 생산자 책임원칙 수립</li> <li>· 최종제품 생산자가 아닌 원료사에게 부담금 부과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li> </ul>
주거·부동산	9번	<b>공공임대 및 사회 주택 대폭 확대</b> 4. 공공임대 주택 및 사회주택 대폭 확대 5. LH임대주택 임대비용 현실화 6. 대학기숙사 건립 확대를 통한 청년 주거비용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쉼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li> <li>-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li> <li>-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li> <li>-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함</li> <li>-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 (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li> </ul>
	10번	<b>증가하고 있는 빈집, 상가 공실 문제 해결</b> 3. 장기 방치되어 있는 빈집과 상가의 ‘빈집세’, ‘공실세’ 도입 4. 지자체의 빈집, 상가 공실 대응 책임 강화 및 법적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 등 국유지, 빈집, 빈 상가, 폐산업시설 등 지역내 유휴공간 및 폐시설 활용</li> <li>- 작은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li> <li>- 예술인 창작공간, 주거공간 조성</li> </ul>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11번	<b>최소주거환경 보장</b> 3.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의 최소면적 보장 4.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을 위한 전면적인 주거 정책실시	-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12번	<b>주거 투기 규제</b> 4. 1인 보유주택 수 제한 5. 고위공직자의 집 보유 제한 6. 기존 정책 기준 강화 (보유세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종과세 ·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함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공개 -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국회의원,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노동	13번	<b>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망 구축</b> 4. 특수 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법 제정 5.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단기간 보험 정책 강화 6.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에 따르는 사업주 부담 감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장려금(융자) 등 지원 추가 혜택, 세제혜택 등 지원 병행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 가「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 배달 앱 등 노동자성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명시, 4대 보험 적용 확대, 산업 안전 및 보건 대책 마련 등
	14번	<b>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 의무화</b> 2.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의무화	-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편성> 확대
	15번	<b>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b>	-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일임금 원칙 실현(「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도입)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4.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강화 5.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실시 6.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을 위한 불안정 고용수당 지급	
	16번	죽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 환경 구축 3.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책 및 보호망 구축 4. 중대재해에 대한 최고책임자 처벌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 유해물질·공정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 원청 위험전이/책임의 하청 전가 방지(기업살인법 제정) · 지역노동건강센터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동물	17번	동물의 기본권 보장 3.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 및 실행 선고 4.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동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법률 제정 필요	-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 동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기본법 제정
	18번	동물원 폐쇄 및 전환 3. 자연생태 차원의 동물 방생 4. 생태동물원 전환을 위한 법률 제정	- 고래류 등 해양 포유류 전시 사육 금지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 중앙정부의 동물원 등 관리 권한 부여 - 동물전시 카페 등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 동물시험 현황 파악 및 동물대체 과학기술 공유시스템 구축 - 동물실험 대체, 감소, 개선(3R)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 - 생태축 복원과 도시녹화 확대 예산확보 및 생태이동통로 설치 확대 -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및 인력·예산 확대
	19번	반려동물 보호 제도 개선 3. 반려동물 분양에 대한 절차 엄격화 4. 동물 보호소의 공적 영역 전환	- 동물 분양·입양·등록 등을 관리하고 동물병원 및 복지시설 등을 고려하여 동물복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동물학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물 보호 및 사각지대 완화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20번	비윤리적인 축사 환경 개선 2. 공장식 축사, 사육밀도 제한 등 동물복지형 축사 확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시 축사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복지	21번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3. 청년, 농민, 재난 등 분야별 기본소득을 통한 정책실험 후 전 국민 확대 추진 4.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립을 통한 기본소득 실시 로드맵 수립	- 모든 농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지원(금액 검토 중. 20만원 또는 30만원)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시켜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넘어 국민으로써 안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리 보장 · 공익형직불금제도를 보완. 관련 법안 발의
	22번	다문화, 차별이 아닌 확대하는 정책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및 기본권 보장 5.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경영평가 개선 6. 우리 사회 안에서 동등한 참여권리, 기회평등, 법적평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	· 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아동의 등록을 위해 병원 및 의료전문가의 출생신고 의무 등을 포함한 필요한 법과 절차 도입 시행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귀화 절차를 현저히 간소화, 최대 법적 체류기간 내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 신속히 이행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정 폐지 내용 엄격히 집행
	23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축 4. 장애인 탈 시설을 위한 환경 구축 5. 학령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6.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 시설, 저상버스 등)	- 탈시설 지원법 제정 - ‘국가 탈시설 종합계획’을 위한 중앙부처-의회-당사자 기구 설치 및 계획 마련 -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동안 단계적 폐쇄.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시 즉각 폐쇄, 경찰에 고발조치 (서울시 이미 시행)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및 시설 연 2회 인권조사 실시 -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의 경우 저상버스 100%로 도입 -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 점자블럭,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50% 도입</li> <li>-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및 중앙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li> <li>-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보행 가능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 운영</li> <li>-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li> <li>· 스웨덴 삼할(국영기업)의 한국형 접근. 소규모 직업재활시설(582개소, '16.12)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li> <li>· 장애인·노인용품 제조판매, 산림·농원 재배, 수리·정바·주택개조 등 다양한 공익 사업 개발.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li> <li>· 장애인 50% 이상 고용.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 내 비장애인과의 동일임금 지급</li> </ul>
	24번	<p><b>재난(질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b></p> <p>4. 마스크 대란 등 재난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구축</p> <p>5. 사회적 약자일수록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문제 해결</p> <p>6.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재발 방지를 위한 생태전환 투자 확대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li> <li>· 고용·교육불평등 등 건강결정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운영</li> <li>-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li> <li>· 국민건강부 신설로 부처별 건강정책 통합, 위기관리 컨트롤타워</li> <li>· 질병관리청(질병관리본부), 안전보건청(안전보건공단)으로 승격</li> <li>-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의사, 정부, 시민 참여) 설치 및 운영</li> <li>- 광역시도마다 건강국 신설, 지역건강위원회 설치로 지역보건의료기관 평가·감독과 정책·예산 심의</li> <li>- 건강영향평가 실시</li> <li>· 모든 정부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건강영향평가 실시</li> <li>· 주거·영양·식수·대기 등 건강불평등 환경개선과 격차 해소</li> </ul>
젠더	25번	<p><b>디지털 성착취 수사와 대응책 마련하고 처벌 강화</b></p> <p>3.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대대적인 수사 및 대응책 마련</p> <p>4.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및 방관자 모두 처벌 강화</p>	<p>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추가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촬영물 공급망(사이트운영자·광고업자, 웹하드·해비로더 등) 단속처벌강화, 범죄수익 몰수</li> <li>-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의 체결로 단속·수사에서 국제 수사 공조 강화</li> <li>-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형량 강화, 동의없는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을 법원 판단시 고려디지털 성범죄</li> </ul>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불법영상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구상 -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부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배포와 소지를 양형기준 대상 포함, 형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사실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제공(긴급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 -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답페이크 등 일반인 등의 사진에 이미지, 영상 합성 제작 배포에 대한 처벌 규정 보완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 채팅앱 관련 성매매방지법 개정, 청소년 채팅앱의 설치 실행의 인증강화 관리 규제 및 단속 체계 마련
	26번	<b>성평등 교육 강화</b> 3. 초중고 과정에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 의무화 4. 세대별 성평등 교육 시행	- 성평등 교육 상시화를 위한 제도개혁 · 고위 공직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성평등 정책 교육 강화 · 초중고 공교육 과정 성평등 교육 강화, 성차별·성폭력 젠더 감수성 교육 체계화
	27번	<b>차별금지법 제정</b> 1. 차별금지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뿐만 아니라 차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다양한 사유와 영역들을 추가로 포함하며,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구제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	28번	<b>교육 불평등 해소의 시작은 대학에서 실행</b> 3. 국공립대 확대 및 대학평준화 정책 추진 4. 부실대학 규모 축소 및 폐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국립대학법 제정 - 기초학문, 뿌리산업,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 -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국립대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확장 ■ 공영형 사립대 시범 운영 후 본격 추진 ■ 대학네트워크로 교류협력 확대 및 균형 발전 -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장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전형, 공동 교육과정, 공동학위</li> <li>(1단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K-MOOC, 전학, 교수 순환근무 등</li> <li>(2단계) 대학간 협의 거쳐 공동학위 수여</li> <li>(3단계) 대학 구성원 공감대 있고 여건 구비되면 공동전형 실시</li> </ul>
	29번	<b>청년 마음건강 정책 확대 추진</b> 3. 마음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공시스템 확대 4. 직장인 건강검진 시 마음건강 상담 의무화	-지역에서 함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돌봄체계 구축
	30번	<b>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 개편</b> 3. 지역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안정성 대폭 강화 정책(내일채움공제 등) 4. 청년 당사자의 직접 지원 확대 및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내일채움공제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신설로 고용안정 강화
	31번	<b>청년금융안전망 구축</b> 4.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금융안전망 구축 5. 약탈적 금융제도의 규제 6. 청년층 대상 급전불법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li> <li>-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학자금 포함 등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li> <li>-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탁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li> <li>-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li> <li>-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lt;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gt;설립 추진</li> <li>-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li> </ul>
청소년	32번	<b>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b> 4. 주민자치회 청년 참여 의무화 5. 예산 결정권을 갖는 청년참여기구 확대 6. 청소년과 교복 입은 시민을 위한 참여예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li> <li>- 세대별 참여예산위원 위촉</li> </ul>
	33번	<b>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보장</b> 1. 만 16세 교육감 투표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하향조정</li> <li>- 피선거권 연령을 모두 18세로 하향조정</li> </ul>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li> <li>-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기준을 폐지해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li> </ul>
34번	<b>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b> 4. 학습선택권 보장 제도화(자율학습, 시간표 등) 5. 다양한 공교육 실시(성평등, 노동, 민주시민 등) 6. 교육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교육 의무화</li> <li>- 성평등교육 상시화를 위한 제도개혁</li> <li>-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커리큘럼 선택권 확대</li> </ul>
35번	<b>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편</b> 3. 학교와 회사의 낯낯이식 관리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중앙관리 및 감시 강화 4. 취업률에 반영되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중도포기 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li> <li>- 최저임금 인상,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연대기금 조성,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증액 등으로</li> <li>-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은 지원규모(400만원) 및 지원횟수(1회) 확대</li> <li>- 공무원·공공기관 등 정부부터 고졸채용 앞장, 고졸채용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li> <li>■ 직업교육 혁신</li> <li>- AI 등 미래산업 및 지역핵심산업을 고려한 학과 개편</li> <li>-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노동인권교육에 노동계 참여 등 노동존중 도제교육</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 포함 등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li> <li>-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재정 지원으로 특성화고 업그레이드 및 격차 해소</li> <li>-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후진학 문호 확대</li> <li>- 전문대와 폴리텍대의 우수 설비와 교육장 공유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li> </ul>
36번	<b>청소년 행복추구권 보장 필요</b> 3.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 창조 기회 부여 4. 하루 교육 총량제 도입(하루 8시간 이상 교육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의 확대</li> <li>- 지역문화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확대</li> <li>- 지역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등 결성 및 운영 지원</li> </ul>
주민	37번 투명하고 개방적인 주민자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화 및 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li> </ul>

분야		정책 제안	김윤기(유성구을) 추가 의견
자치		3.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의 지원금 사용 내역 의무 공개 4. 각종 주민자치 관련 대표 및 위원들의 참여방식 간소화	- 주민조례발의의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및 전자청구 제도 도입(「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1/20~1/5 → 1/50~1/10) 및 대상 확대 -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 주민소송 대상확대 ·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환경, 건설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확대
	38번	<b>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다시 마을로 가는 이중분권 강화</b> 3. 자치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가 주민들을 실질적인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이중분권 정책 전면 확대 4. 주민들이 주민세를 직접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권한 강화	- 권한을 지방으로 지역을 주민에게 참여형 자치분권 실시 -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보장 - 재정분권 실현으로 자치재정권 보장 -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화 및 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
	39번	<b>지속가능한 자치기반 구축</b> 3. 마을공간의 시민자산화 지원 4. 지역자본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지역공동체에게 상가 매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